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을 위한 e-Governance

e-Governance for the organization of the North East Asia e-commerce Community*

최석범(Seok-beom choi)**, 이용근(Yong-Keun Lee)***, 이충배(Choong-bae Lee)****,
김창봉(Chang-bong Kim)*****, 김시중(Si-joong Kim)*****, 박경희(Geong-Hee Park)*****

Abstract

As a condition for efficient establishment of e-Governance, each country in Northeast Asian region should guarantee political security and stable economy policy in order to reduce distrust and discontent among the nations in the region. It is also required to converge ultra-regional systems and also to develop the protective contrivances to strengthen regional security. Basic directions for the organization of e-Governance should include successive procedural approaches, step-by-step increase of the participating nations and parties, phased extension of cooperation. In order to drive this initiative in proactive and sustainable manner, it is required to present the vision on e-Governance in Northeast Asia community, to set up a secretariat, to eliminate obstacles, to establish supporting policies for private sector participants. The prpose of this paper contributes to activate the e-Commerce in Northeast Asia by constructing the e-Governance in Northeast Asia step by step.

Key Words : North East Asia e-commerce Cooperation, Organization of North East Asia e-commerce Community, e-Governance.

목 차

I. 서론	IV. 동북아 전자상거래 e-Governance 결정요인 분석
II. 선행연구 분석과 e-Governance의 정의	V. 동북아 전자상거래 e-Governanc 구축방안
III. 동북아의 전자상거래 환경	VI. 결론 참고문헌

* 본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BS3035).
한국 국제상학회 2007년도 동계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sbchoi@cau.ac.kr

*** 중앙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kimchangbong@hanmail.net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수, cblee@cau.ac.kr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ylee@cau.ac.kr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공동저자, sijoong@sogang.ac.kr

*****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박사급연구원, 공동저자, pgh6424@hanmail.net, 019-526-6424

1. 서론

정보사회의 대두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국내산업의 생산, 판매, 물류부문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기술은 더욱 더 발전되어 앞으로 도래할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전자상거래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각국은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확산은 국가간의 전자상거래에도 적용되어 정치제도, 경제수준과 정보기술의 인프라가 다른 국가간에 법적, 제도적인 합의와 기술적인 협력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화와 지역협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EU, NAFTA에 이어 세계 제3위 교역량을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의 경제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각국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동북아의 각국은 정치이념과 역사적인 갈등 등으로 협력관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동북아의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협력과 각국 정부의 법제도적인 합의와 표준화 등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그동안의 전자상거래 협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e-Governance(e거버넌스) 개념에 기초하여 동북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구성 e-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990년대 전통적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에 따른 국정관리 메카니즘으로 등장한 거버넌스는 다분히 다의적이고 다양한 개념을 함축하고 있어 국내에서 그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정치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첫째, 관련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배분한다는 점 둘째, 공동결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한다는 점 셋째, 이익을 모색하고 차이를 조정하는 메카니즘, 과정, 관계, 그리고 제도라는 점 등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¹⁾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을 위한 e-거버넌스의 정의를 내리고 '협력적 지역 e-거버넌스로서의 참여자', 'e-거버넌스 역량의 결정요인들', 'e-거버넌스 체제내의 참여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을 위한 e-거버넌스에 대한 구축 방안을 모색하여 동북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 그 연구목적이다.

II. 선행연구 분석과 e-Governance의 정의

1. 동북아 전자상거래의 선행연구 분석

1) 동북아 전자상거래의 선행연구 분석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협력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다음

1) Hirst, 2000; Pierre, 2000; Rhodes, 2000; Stoker, 2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2006.12, p.30.

<표 1>과 같으며, 거버넌스와 관련한 전자상거래 논의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표 1> 선행연구 고찰

	저 자	내 용
동북아 전자상거래	최석범(2003) ²⁾	동북아 e-Hub화의 필요성과 동북아 e-Hub화를 위한 전자권리등록기관과 전자문서등록저장소의 운영방향을 모색
	최석범(2005) ³⁾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규모 추이, 동향, 동북아 전자상거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다룸
	최석범(2006) ⁴⁾	일본의 전자상거래 실태와 전자상거래상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
	이병렬외(2006) ⁵⁾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제도구축에 관한 내용
	최석범외(2006) ⁶⁾	중국의 전자상거래 실태와 전자상거래상의 문제점, 해결방안
동북아 전자상거래 협력	최석범외(2007) ⁷⁾	동북아 FTA의 필요성 및 전망, 한중일 3국의 FTA 추진 상황과 동북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윤광운(2002) ⁸⁾	동북아지역의 전자상거래 분쟁실태 및 사례를 다루고, 동향분석 및 한중일의 협력방안
	윤광운(2003) ⁹⁾	중국의 전자상거래 정책 및 법적 규제동향, 동북아지역의 전자상거래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동북아 지역협력방안
	문원기(2005) ¹⁰⁾	동아시아 전자무역공동체 형성의 기본 방향과 전자무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분야별 협력 방안.
	최석범외(2007) ¹¹⁾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협력현황, 문제점과 추진방안

2) e-Governance의 개념적 고찰

(1) governance의 개념

- 2) 최석범, “동북아 e-Hub화를 위한 전자권리등록기관과 전자문서등록저장소의 운영방안”, 「국제상학」, 제18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 3) 최석범, “동북아지역 전자상거래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무역학회지」, 제30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5.
- 4) 최석범·이충배·박경희, “일본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 5) 이병렬·김종철, “중국 전자상거래 제도구축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
- 6) 최석범·이영찬 “중국 전자상거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 7) 최석범·김창봉·김시중·최혁준, “동북아 FTA 전망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국제상학」, 제22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3.
- 8) 윤광운, “동북아지역의 전자상거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7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 9) 윤광운, “중국의 전자상거래시장 규제동향과 동북아 지역협력방안”, 「무역상무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2.
- 10) 문원기·이윤·윤창인, “동아시아 전자무역공동체 형성 방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7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4.
- 11) 최석범·이영찬·박경희, “동북아 전자상거래협력의 현황과 추진방안”, 「국제상학」, 제22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거버넌스는 정부역할과 기능간 불일치에서 탄생한 대안적 국정관리 개념을 의미한다. 거버넌스는 협의적으로 통치의 행위나 방식 또는 규제체계, 즉 한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와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질적 측면에서는 거버넌스를 문명화된 방식을 통한 질서창조와 갈등해소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지속가능한 인간계발을 위해 서로 참여와 협력을 요구한다. 거버넌스는 정부를 포함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이고 비정부적인 메커니즘들도 포함한다.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나 조직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필요를 충족시키며 욕구를 완성한다. 세계화, 분권화 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역동적이고 다양하며 복잡해진 사회관계를 전통적 의미의 정부가 조정·해결하는데 취약성을 드러내자 새로운 유형의 국정관리 메커니즘으로 거버넌스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ASPA¹²⁾는 거버넌스는 제도, 조직, 시민이 바람직한 방침을 정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거버넌스는 공공부문들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으로 사회가 협력적 의사결정을 위해 스스로 어떻게 조직화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 투명한 메커니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Moore¹³⁾에 의하면 거버넌스는 정부를 의미하는 것도 통치행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기관, 조직, 기업, 사회가 스스로 바람직한 방침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이러한 실체들이 시민, 관료들과 함께 어떻게 상호 작용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며, 가장 기본적 수준에서 보면 사회가 집합적 의사결정을 위해 스스로 조직화하는 과정이며, 이들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⁴⁾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 경쟁 또는 대립하는 과정’이다.¹⁵⁾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거버넌스를 국정관리나 협체 체제, 동반자적 통치, 공동경영으로 번역하는 등 용어 해석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해석을 유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표 2>, <표 3>에서도 같이 거버넌스가 정치학, 경제학, 정치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의되고 있으며 각 학문분야에 따라 그 시각과 초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¹⁶⁾이다.¹⁷⁾

(2) e-Governance

ASPA에 의하면 e-Governance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 및 신

12) ASPA, “Benchmarking E-Government: A Global Perspective: Assessing the Progress of the UN Member States,” 2002. <http://www.aspanet.org>.

13) G. Moore, *e-Governance*, 2002. <http://www.icegov.org>.

14) 임광현, “u_정부하에서 e_거버넌스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강화방안 一考”, 「한국거버넌스학회, 영호남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p.210.

15) Jon Pierre(ed.), *Debating Governance: Authority, Steering, and Democracy*, Oxford Press, 2000.

16) 강황선, “정부중재형 거버넌스 체계의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자들의 범위와 역할, 그리고 거버넌스 역량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4권 제3호, 서울행정학회, 2003.

17) 이미홍, 김두환,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8권 제2호, 서울행정학회, 2007, p.215.

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참여민주주의의 제고를 위한 정부, 공직자, 시민들간의 민주적 상호작용 및 과정”이다. 즉, 시민들과 공공부문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Moore에 의하면 e-Governance는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ICT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UNDP¹⁸⁾의 경우 e-Governance란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를 통합한 개념으로 전자정부를 통해서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시민과 정부가 양방향 의사소통을 하며, 협력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e-거버넌스의 개념은 사회 주요 구성원들 즉, 국가, 시민, 기업 간에 상호작용을 확립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사회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거버넌스의 원칙, 전략, 그리고 ICT에 의한 시스템과 툴의 결합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Kettl¹⁹⁾은 정부가 사회부문의 상부구조로서 결정, 규칙, 역할, 집행, 산출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에 거버넌스는 사회부문간의 상호기능성을 통해 과정, 목표, 성과, 조정, 영향을 지향한다고 말하고 정부라는 개념에서 전자정부라는 확장 개념이 도출되며, 거버넌스라는 개념에서 전자적 개념을 접목·확장한 e-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²⁰⁾

e-거버넌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터넷 거버넌스가 있는데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구축하는 운영 및 관리체계를 의미한다.²¹⁾

<표 2> 학문분야별 거버넌스 개념의 다양성

	경제, 경영, 행정학	비교정치학	국제관계학
목적	효율성, 효과성	참여성, 형평성	국제협력, 효율성, 평화
분석대상	행위자, 네트워크, 제도	행위자간 관계, 네트워크, 제도	국제기구, 국제네트워크
정당성	결과	과정(민주성), 결과(효용성)	과정(민주성), 결과(효용성)
국가역할	축소	보완	축소와 보완

자료: 오현철, “국가정책결정 거버넌스와 공론조사: 토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 제15집, 2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p.158.

<표 3> 학자별 거버넌스 개념의 주요내용

학 자	내 용
Kooiman(1994)	정부와 사회의 관계가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작용관계로 변하여 역동성, 복잡성, 다양성 강조
Rhodes(1997)	최소국가, 기업적 거버넌스, 시장유인체제의 도입, good 거버넌스, 사회적 사이버네틱체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강조
Stoker(1998)	상호의존성, 자원의 교환, 게임규칙과 국가로부터 자율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화된

18) UNDP, *e-Governance Strategic Note*, October, 2003.

19) Donald F. Kettl, *The Transformation of Governanc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2002.

20) 김구, “e-거버넌스의 발전모형과 활용과제에 대한 탐색적 접근”, 「지역발전연구」, Vol.11, No.1, 조선대학교, 2006, pp.65-66.

21) 김희철, “인터넷 거버넌스와 자율규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 「전자무역연구」, 제3권 제2호, 중앙대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5.11.30.

	네트워크
Pierre(2000)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들간에 정책을 조정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통치시스템
Jessop(2000)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들 간의 적극적, 소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장기적 합의를 위한 협상의 제도화
Peter(2001)	제도화된 정책 공동체 내의 이해관계자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일반시민, 직능단체 등 - 을 정책과정에 참여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공적 의사결정의 한 형태
ASPA(2002)	제도, 조직, 시민이 바람직한 방침을 정해 가는 과정으로서 공공부문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으로 파악
Moore(2002)	정부를 의미하는 것도 통치행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기관, 조직, 기업, 사회가 스스로 바람직한 방침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파악

자료: 한승준, “도시정부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 p.92.를 참조하여 보완 작성.

(3) 거버넌스의 분류

시장형 거버넌스(market governance)는 시장기구를 통해 사회적 주체들간의 협동질서를 만들어내는 국정관리를 의미한다. 즉 국가 또는 사회질서가 특정 개인 혹은 집단들의 의도하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이 모형은 생산적 자원을 가진 수평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질서의 창출을 위해 단기계약을 맺고 일시적으로 협동하는 방식이다.

계층적 거버넌스(hierarchical governance)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획이나 지시, 규제 등 권위적이고 작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국가 또는 사태질서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이다. 이 거버넌스에서는 생산요소의 소유자들이 생산적 협동을 위해 자신들의 관계를 일시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속적이고 수직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장기적 관계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반면 소비자들은 이 방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생산요소와 소비자로 구성된 일종의 조직체 내지 협력체인 계층적 조직 즉, 기업에게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의 공급을 의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장형 거버넌스를 통해 질서를 창출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계층적 거버넌스가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시장형 거버넌스와 계층형 거버넌스의 중간형 거버넌스의 일종으로 네트워크형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 모형이 있다.

거버넌스는 분석수준에 따라 국가간 협력과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인접 국가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또는 그러한 지정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 지역공동체내에서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개별국가 내부에서 새로운 국정운영 방안을 찾기 위한 국가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 가상공간을 통해 형성되고 운영되는 사이버 거버넌스 등으로 분류된다.²²⁾

22) 최성욱,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행정학계의 거버넌스 연구경향 분석”, 「정부학연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적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로 구분할 수 있다. 갈등적 거버넌스는 이해관계가 대립적이고 갈등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갈등적 거버넌스의 경우에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갈등적 거버넌스에서의 대응방식은 주로 항의 시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갈등적 거버넌스에서는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협의의 공간이 존재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갈등과 논쟁이 존재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행위자들의 대응방식은 주로 대화와 타협이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에서는 협의의 공간이 존재하고, 이러한 공간은 지속적이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행위자들은 서로 자신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드러내고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이해와 협력을 형성할 수 있다.²³⁾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거버넌스의 분류

Rhodes	Pirre & Perters	Hewitt	김선욱	김석준외
기업관리방식으로서의 신공공관리로서의 좋은 거버넌스로서의 국제적 상호의존성으로서의 사회-사이버네틱체계로서의 신정치경제로서의 네트워크로서의	계층제로서의 시장으로서의 연결망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글로벌 거버넌스 지역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국가 거버넌스 사이버 거버넌스	갈등적 협력적	국가중심적 시장 중심적 시민사회 중심적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2006.12; 홍성만, “협력적 로컬거버넌스의 대두 4”, 「한국행정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4.6 등을 참고로 작성.

(4)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을 위한 e-거버넌스의 정의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을 위한 e-거버넌스는 ‘동북아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영역의 각기 다른 개별 행위자들이 원활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 제도, 기술 등에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e-거버넌스 체제의 ‘참여자’, ‘e-거버넌스 역량의 결정요인들’, ‘e-거버넌스 체제내의 참여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구성을 위한 e-Governance는 거버넌스의 성격상 협력적 지역거버넌스 모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모형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동북아는 역내의 역사, 경제, 안보, IT인프라 등이 각각 달라 전자상거래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한중일을 제외한 북한, 몽골, 러시아는 아직 인프라 부문에서도 취약하여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 중국의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한중일 중심의 협력 공동체로서 우선적

구], Vol.10, N0.1,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4, pp.239-261.

2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2006.12, p.33.

으로 진행하여 다른 국가들을 선도해야 한다. 기존의 전자상거래 협력은 한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진척이 되고 있지만 한중일의 협력은 아직까지 부진한 상태이다.

<그림 1>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을 위한 e-Governance의 정의와 분석틀



III. 동북아의 전자상거래 환경

1. 정보화지수 비교

한국정보원에 의해 산출된 국가정보화지수는 각국의 PC보유대수, 인터넷이용자, 초고속인터넷 가입가구, 유선전화회선, 이동전화 가입자, 무선초고속인터넷 가입자, TV보유가구, CATV 가입가구를 구성으로 각 가중치를 주어 산출한 값으로서 한국이 3위, 일본이 11위, 중국이 42위, 러시아가 33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표 5>에서와 같이 e-비즈니스준비도 지수에 있어서는 한국이 16위, 일본이 18위, 중국이 56위, 러시아가 57위로서 심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밖에 정보화 관련 지수와 인터넷관련 지수에 있어서도 동북아 각국의 정보격차가 격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일본을 제외한 중국과 러시아는 정보화 수준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계 순위 통계에서 몽골과 북한은 아예 그 순위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표 5> 동북아 각국의 정보화 지수 (기준: 2007)

항 목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보화 관련	국가정보화지수(2007) 1)	3	11	42	33
	e-비즈니스준비도(2007) 2)	16	18	56	57
	전자정부준비지수(2005) 3)	5	14	57	50
	정보사회지수(2005) 4)	10	18	43	42
	네트워크 준비지수(2006) 5)	19	14	59	70
	디지털기회지수 6)	1	2	77	51
	기술인프라부문 국가경쟁력(2007) 7)	6	20	-	-
인터넷 관련	온라인참여지수 3)	4	16	25위 밖	25위 밖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2006) 8)	4	14	20위 밖	20위 밖
	사이버 보안지수 9)	22	25	36	38위 밖
	초고속인터넷 비용(저가순) 9)	2	1	22	39위 밖
	IPV4 주소 보유현황 10)	9	10위 밖	4	10위 밖
	IPV6 주소 보유현황 10)	5	3	10위 밖	10위 밖
	국가최상도메인보유 11)	13	7	14위 밖	14위 밖
	국가별 AS번호 보유 12)	10	10위 밖	10위 밖	2
스팸전송(2006) 13)	3	13위 밖	2	11	

자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2007, pp.31-32; BU, "The 2007 e-readiness rankings", 2007.4 등 기타 문헌들을 참조하여 작성.

<표 6> 국가정보화지수 부문별 순위 (기준: 2005년)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컴퓨터 부문	16	17	47	35
인터넷 부문	1	9	43	42
통신 부문	6	23	44	31
방송 부문	12	5	34	16
PC보유	17	16	47	35
인터넷이용자	5	7	47	41
초고속인터넷 가입가구	1	12	32	43
유선전화 회선	11	20	33	32
이동전화 가입자	29	31	47	26
무선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	3	34	34
TV 보유가구	6	31	36	9
CATV 가입가구	1	13	29	37

자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제서.

<표 6>의 국가정보화지수 부문별 순위에서 살펴보면, 인터넷 부문과 초고속인터넷 가입가구 수, 무선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CATV 가입가구 수에서 동북아 지역내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하여 국가정보화수준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일본은 방송부문과 PC보유 부문에서 한국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는 한국이 앞서는 수준이다.

2. 동북아 각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1) 한국

2006년 한국의 전자상거래 총 규모는 413조 5,84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5.4% 증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둔화되던 증가율이 다소 상승하였다. 각 거래주체별 구성비를 보면 2005년과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B2B 비중이 소폭 감소하고, B2G 비중은 소폭 상승하였다. 거래 주체별로는 B2B가 전자상거래 총 규모의 88.5%인 366조 1,910억 원으로서 전체의 88.5%를 차지하며, 기업과 정부간의 B2G가 34조 4360억 원(8.3%), B2C가 9조 1,320억 원(2.2%), 기타 3조 8,26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에 비해 B2B는 14.7%, B2G는 18.6%, B2C는 15.3% 증가한 수치이다.²⁴⁾

2006년 국내 사이버쇼핑몰 수는 4,531개로 2005년 대비 4.0% 늘어났으며, 취급상품 범위별로는 전문몰이 4,289개로 4.7%를 차지했고, 종합몰은 5.3%만을 차지했다.²⁵⁾ 기업의 전체 매출액 중 전자상거래 판매액의 비중은 2005년 3.3%, 2006년 상반기 3.0%, 2006년 하반기 4.2%로 나타나 2005년 대비 2006년 판매액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매액 중 전자상거래 구매액의 비중은 2005년 12.4%, 2006년 상반기 7.0%였으나, 2006년 하반기에는 18.0%로 판매액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²⁶⁾

2) 일본

일본 경제산업성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의 협의와 광의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각각 149조 엔, 231조 엔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5.3%, 3.5% 상승하였다. B2B 전자상거래시장의 경우 제조업의 시장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수송용 기계제조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B2C 시장 규모는 4.4조 엔이었다. 업종별 B2C 전자상거래 이용현황에 있어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정보통신이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대기업 통신판매를 포함하는 종합 소매업이 22.5%로 2005년보다는 약간 줄었다.²⁷⁾

3) 중국

2006년 중국의 인터넷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33.1% 증가한 109억 달러(835억 위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006년 말까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거래액은 1,438억 달러(1조 1,000억 위안)로 이는 전년대비 48.6% 증가한 수치이다.²⁸⁾ B2B 시장은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 교역액 중 95%를 차지, 2005년의 경우 전년 대비 106% 성장한 6,500억 위안을 기록하고 있다. iResearch사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에는 중국의

24) 통계청, "2006년 4/4분기 및 연간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결과", 2007.3, p.1.

25)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2007, pp.116-117.

26)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6년 국내기업 e-비즈니스 현황조사」, 2007.1, p.64.

27) 최석범·이영찬·박경희, "동북아 전자상거래협력의 현황과 추진방안: 한·중·일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2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p.255.

28) 전게서, pp.398-399.

B2B 시장규모가 14.5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용 기업 수는 2005년 153만 개에서 2010년이면 306만 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쇼핑시장 이용자 수도 2005년 1,855만 명에서 2010년에는 7,4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⁹⁾

4) 러시아

러시아의 IT 인프라 현황은 통신가입자 수 및 PC 보급률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아직 세계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평균 성장률이 매우 높으며, IT 인프라 수준도 해마다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PC 사용자는 2006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3%인 2,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IT 시장은 2005년 대비 17% 성장한 130억 6,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특히 IT 수출은 전년 대비 53.8% 성장한 14억 9,5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IT 수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풍부한 고급인력을 바탕으로 한 IT 아웃소싱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³⁰⁾

러시아의 IT 산업 시장은 향후 2010년까지 평균 22%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³¹⁾ 이는 e-Russia 프로젝트의 시행, IT 산업 육성전략의 수립 등 정부의 정보화관련 정책의 지에 기인한다. IT 산업육성전략에 따라 PC 및 관련부품의 무관세 수입 및 수요촉진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대규모 상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향후 IT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러시아 정부는 IT 산업 활성화 및 e-Russia 추진계획에 따라 이미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두무나 지역에 테크노파크를 건설하였고, 2010년까지 여러 개의 IT 테크노파크 건설을 예정하고 있다.

2010년까지 러시아의 IT 분야 아웃소싱은 전 세계 아웃소싱의 7%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세금혜택, 지적재산권 규제 강화 등 정부정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국제 유가 상승의 효과로 경제 호황을 맞고 있는 러시아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에 맞추고 있으며, 컨버전스 시대에 대비한 준비 작업도 궤도에 오른 상태이다. 특히 와이파이(WiFi)는 수준급으로, 공공장소의 핫스팟 존에서는 무선으로 11Mbps급 초고속인터넷을 즐길 수 있으며, 와이브로의 도입도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³²⁾

3. 동북아 각국의 전자정부 실태

1) 한국

한국의 전자정부 로드맵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도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

29)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시장보고서,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현황과 발전 전망”, 2006.6.20, pp.6-7.

30) <http://www.russoft.org>. 3rd Annual Survey of the Russian Export Market for Programming Services, Solutions and Products. 참조.

31) 허태완, “러시아 IT 산업정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4.

32) 전자신문, “러시아 IT 유감”, 2006.5.14.

고 있다. 2003년에는 로드맵 세부추진 과제 선정, 추진체계 정비 등 기반을 조성하였고, 2004년에는 각 과제별로 업무재설계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발굴, 전자정부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공통기반을 구축하였다. 2005년부터 BPR/ISP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로드맵이 완료되는 2007년에는 대부분의 과제들이 보급·확산 또는 통합서비스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³³⁾

2004년부터 2005년 UN의 전자정부 준비도 평가에서 한국은 세계 191개국 중 5위로 평가되었으며, 전자정부 발전단계 중 최고 수준인 5단계에 80%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2006년 미국 브라운대학의 전자정부 수준평가에서도 한국은 세계 200여 개국 중 1위로 평가되는 등 세계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은 높게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전자정부 서비스들의 결과물들이 우수사례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관세청의 전자통관서비스 UNIPASS는 세계 최초로 100% 전자수출입체계를 완성하여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169개국 중 가장 빠른 통관 시스템으로 WCO에서 지적재산권상을 받기도 하였다.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는 2003년에 UN의 공공서비스 혁신상을 수상하였으며, 2005년에는 나라장터의 전자조달절차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되기도 하였다.³⁴⁾

2) 일본

일본의 전자정부 추진은 1994년 12월에 결정한 '행정 정보화 추진 기본계획'에서 본격화되었다. 이 계획을 기초로 행정 내부의 사무·업무 효율화, 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고, 중앙부처 LAN 정비 및 1인 1대 PC 보급이나 중앙부처 LAN과 상호 접속한 행정기관 전용 네트워크인 '가스미가세키 WAN' 정비 등의 기반 정비,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의 각종 정보제공 등을 하고 있다.

e-Japan 계획에서 중점 분야의 하나인 전자정부 추진을 위해 특히, 국민의 행정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민원신청·신고 등의 수속을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행정절차 온라인화법'을 시작으로 법정비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신청·신고 등 수속의 약 96%가 온라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7월 각 부처 정보화총괄책임자 연락회의에서 2005년까지 전자정부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처법을 규정한 '전자정부 구축계획'을 책정하였다.

향후 전자정부 추진은 IT신개혁 전략, 중점계획 2006 및 전자정부 추진계획에 기초해 계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러한 계획상의 추진목표는 ① 이용자 시점에서 온라인 이용률 50% 이상을 2010년까지 달성하고, ② 업무·시스템을 더욱 효율화·합리화하기 위해 정부 전체의 최적화를 추진하며, ③ '①'과 '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체계·평가체제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IT신개혁 전략 중점계획 2006년' 책정의 기본방침(안)에서 내각관방 내에 '전자정부 추진관리 보좌관'과 '전자정부 추진관리실' 설치가 포함되면서 전자정부 추진체계가

3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2007, p.51.

34) 전게서, p.53.

강화되었다.³⁵⁾

3) 중국

2001년 8월 주룽지 총리가 이끄는 국가정보화선도그룹(Leading Group of State Informatization)이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국가정보화선도그룹은 첫 번째 회의에서 전자정부는 국가정보화의 최우선 사항이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중국정부의 의도는 전자정부가 중국 전체 정보화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 전자정부 발전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여 2006년 1월에는 중앙정부 포털사이트(www.gov.cn)가 본격 가동되었다. 중국어와 영어로 지원되는 중국의 중앙정부 포털사이트는 정부구조 및 정부역할 등에 관한 정보제공, 시민과 기업,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각종 검색 엔진과 정부와 국민간 의사소통 채널 등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이트에는 정치, 경제, 금융, 농업, 환경, 교통 및 통신, 일반산업, 여행, 교육, 문화, 과학기술, 스포츠, 종교, 통계 등 중국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자, 취업, 사업, 이민, 결혼, 입안 등 외국인을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특별 섹션이 마련되었다.

2005년에 중국이 전자정부 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약 61억 달러로, 전년대비 13.6%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정부가 전자정부 사업에 투자한 비용은 연평균 15~16%씩 증가하여 2008년 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3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³⁶⁾

4) 러시아

러시아는 'e-Russia' 계획에 따라 전자정부 구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정부는 '전자화 프로젝트'의 핵심사안이다. 전자정부의 구축에 있어, 전자정부 정보량의 확대 및 정보접근성의 향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e-Russia는 낙후된 통신 인프라를 개선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여 보다 역동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전략 중 하나이며 러시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모든 정보통신정책의 집대성이라 말할 수 있다. 전자정부 추진계획에는 학술자료뿐만 아니라 정부 각 기관들의 활동, 예산, 법안, 각 경제기관들의 마케팅 조사자료나 기업의 활동내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자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터넷을 통한 자료공유의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6년 8월에 승인된 새로운 단계에는 전자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을 강조하고 있으며, 2007년 연방 전자정부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0년까지는 공공부문 커뮤니케이션의 65%를 전자화할 계획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 추진으로 시민들과 더욱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

35)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2007, pp.393-395.

36) 전게서, pp.397-398.

의 조성, 공공 행정기관 및 지방행정부 업무효율성 향상, 공공 행정기관과 경제주체간 상호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³⁷⁾

정보통신 개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e-Russia Program 2002~2010'은 현재 3단계(2005~2010)로 태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계획 초기부터 강조되어 왔던 국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대한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전자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국민과 정부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러시아와 외국간의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IT 기술 확보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이 단계별로 진행될 것이다.³⁸⁾

IV. 동북아 전자상거래 e-Governance 결정요인 분석

1. 참여자

동북아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북한, 몽골, 러시아 6개국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제개방으로 인한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북아의 위상도 제고되었고, 글로벌화와 함께 지역화의 대두는 NAFTA, EU에 이은 또 하나의 권역으로 동북아가 대두되었다. 그러한 필연의 결과로 경제협력 등 동북아의 결속을 다지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면 전체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특히나 IT혁명으로 더욱 더 그러하다.

따라서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에 있어 동북아 전체가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동북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구성을 하여 단계별 협력의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공동체 구성의 참여자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 참여자

	한국	일본	중국
정부기관	지식경제부	경제산업성	신식사업부 신식화추진사 상무부 신식화사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중화인민공화국 신식사업부
단체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자거래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일EC추진위원회 한국무역정보통신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차세대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 (사)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	중국인터넷협회 중국전자신식산업발전연구원 중국전자상거래협회 중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업체	관련업체	관련업체	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 관련업체

자료: 한일EC추진협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37) <http://www.neweco.ru>. 'e-Russia' Program. 참조.

38) 이민규, "러시아 정부의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 제19권 17호, 통권424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9.17.

2. e-거버넌스 역량의 결정요인들

1) 각국의 참여도

동북아 전자상거래와 각국간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각국의 참여도가 매우 중요한데 즉, 전자상거래를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 등 유형적인 부분과 표준화, 보안, 공동모델개발, 법제도 등 무형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안들을 민간의 협의체가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2) 전자상거래 정책의 정합도

동북아 각국들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전자상거래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정책을 여러 국가기관에서 분담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국가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하여 규범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정부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³⁹⁾

<표 8>과 같이 각국마다 상이한 전자상거래 정책들을 보이고 있는데 동북아 전자상거래 e-Governance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정책의 정합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표 8> 한중일 전자상거래 정책 비교

	전자상거래	전자서명 /인증	조세시스템 준비	보안	소비자 보호	사생활 침해보호	지적재산권
한국	●	●	◇	●	●	●	●
중국	◇	●	◇	●			●
일본	●	●	◇	●	●	●	●

주: ●: 법률, 지침서 및 지도 ◇: 행동계획 및 검토

자료: Ryoji Yamada, "A Survey concerning Overseas Progress in EC," *ECOM Journal*, No.4, p.97.
이충배·이정민, "한중일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자무역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4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2, p.140을 참조하여 재구성.

3) 정보화

동북아에는 6개국이 상존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정보격차가 존재한다. 무선 인터넷 분야나 콘텐츠 등에서는 일본이 제일 앞서고 있고, 유선 인터넷 분야의 솔루션 기술은 한국이 우수하며, 중국은 유선 인터넷 분야에서는 한국에, 무선 인터넷 분야에서는 일본에 각각 뒤지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점차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국가들은 아직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동북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부분이 먼저 구축되어야 하며

39) 이충배·이정민, "한중일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자무역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4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 p.145.

활성화를 위한 보안과 공동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동북아 전자상거래를 위한 e-Governance는 동북아 각국과 동북아 지역의 정보화가 필수적이고 그 역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4) 리더쉽

동북아 경제활동의 중심점 역할을 한국과 중국, 일본이 각각 하고 있으며 동북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중심세력인 한중일 중심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상호 협조적이거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한중일 삼국의 협력에 있어서는 중국과 일본의 불편한 관계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북아 전자상거래와 동북아 e-Governance의 구축에서도 강력한 리더쉽이 요구된다.

다른 국가와 유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동체 구성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이끌어내고 동북아 국가간 상호 이익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한국이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후에는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상호 합의를 도출하고, 상호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면 동북아 e-Governance의 구축도 용이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 e-거버넌스 체제를 유지하는데 바람직한 리더쉽의 형태는 협력적 리더쉽이다. <표 9>는 이러한 협력적 리더쉽의 조건들을 열거하고 있다.

<표 9> 협력적 리더쉽의 조건

	내 용
1원칙	리더는 모든 참여자들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반영토록 해야 한다.
2원칙	리더는 모든 참여자들의 의견과 고충을 듣고 이들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원칙	리더는 참여자들의 관심과 그들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4원칙	리더는 사회의 각 참여자들이 서로 상호의존의 관계성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상대적인 차이점들을 고려하여 각종 편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부담토록 해야 한다.
5원칙	리더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서로 협력함으로써 각종 정책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과 갈등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원칙	리더는 참여자들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이들 참여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7원칙	리더는 조직내부에서의 이해관계와 다른 참여자들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런 갈등들을 공개토론이나 객관적인 보고, 혹은 필요하다면 제3자의 심의를 거쳐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Clarkson Center for Business Ethics, *Principles of stakeholder management*, 2001. 강황선, “정부중재형 거버넌스 체제의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자들의 범위와 역할, 그리고 거버넌스 역량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4권 제3호, 서울행정학회, 2003, p.218.을 참조하여 재구성.

5) 유인 정책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구성을 위한 e-Governance을 정립하기 위하여 각국을 참가시킬 수 있는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의 강점과 장점 홍보를 통하여 불참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동북아 각 국이 상호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사업도 좋은 유인이 될 것이다. 전자상거래 수익모델이 민간사업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동북아에서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의 개발과 프로그램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정책이 필요하다.

3. e-거버넌스 체제내의 참여자들의 역할

1) 정부기관

각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제도 개혁과 법률개정을 수행하여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인프라 기술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과 각 정부의 법률적, 제도적인 지원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전자상거래 인프라, 인증·보안·결제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동북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국의 표준화 작업과 기술적 호환성, 법과 제도, 전자상거래 관련 사고의 책임소재, 공정경쟁, 전자상거래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각국은 전자상거래의 활용 확대가 가능한 국내의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기업들에게 교육지원, 세제지원, 정보지원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IT 기반의 통합 정보제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단체

동북아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 오프라인에서의 상거래 법제도와 규칙을 정비하여 전자상거래 법규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 즉, 전자상거래는 네트워크를 통한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인증, 전자결제 등의 보안시스템을 완벽하게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별 국가내의 전자상거래와 동북아 전자상거래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와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기관에 건의를 하는 등 기업과 정부기관과의 가교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IT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사업의 공동 연구와 추진을 위한 상호 전문인력 교류를 추진하고 전문 인력에 의한 전자상거래 관련 컨설팅 비즈니스로서 각국에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제반문제와 상담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동북아 e-Governance의 경우 자율규제에 입각한 체제로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기업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정이나 국가간의 협의를 위한 표준화 작업들은 필요하나, 그 실질적인 추진세력은 민간기업들이 담당해야 한다. 기존의 협의체나 e-marketplace를 통한 전자적인 상거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정 종목의 비즈니스에 국한되어 있고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 향후 유비쿼터스 사회를 맞아 RFID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은 민간업체들의 적극적인 국제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여야 한다.

V. 동북아 전자상거래 e-Governance 구축방안

1. 효율적인 e-Governance 구축 조건

APEC, ARF, KEDO 등의 설립에 비추어 볼 때 동북아는 초지역적 국제환경의 배경에서 안보 정책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동북아 거버넌스 창출을 위해 쌍무주의가 개별적인 쌍방관계를 결합시키고, 상호견제와 협력의 메커니즘이 강화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쌍무주의는 광범위한 지역 및 국제적 협력들 속에 결합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다면적이고 비경쟁적인 쌍무주의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러한 쌍무주의에 입각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e-Governance구축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전체에 기초하여 아시아의 일반적 상황과 동북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안정적인 동북아 전자상거래 e-Governance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안보와 경제정책 보장

주요 강대국내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쌍무주의는 냉전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규제적 상호작용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고 기본적 가치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쌍무주의가 개별적 상호작용을 규제하고, 일탈적 행동에 대해 상호구속력을 가지는 엄격한 구조로 발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e-Governance 구축을 위한 쌍무주의는 광범위한 지역 및 정치안보와 경제 정책에 의해서 보장되어야만 하고 상호주의에 의해 국가를 확대시켜야 한다.

2) 국가간 불신, 불만 제거

기본가치의 차이 때문에 동북아에서 국가간의 상호불신, 영토적 갈등 등의 제거가 동북아 e-Governance 구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수요소이다. 즉, 동북아 e-Governance는 현 동북아 정세를 기초로 하여 성립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국가에서 심각한 정치적 긴장을 제거할 수 있는 공통의 규범과 규칙을 제공해야만 한다.

3) 초지역적 제도의 수렴

동북아 e-Governance는 초지역적 레짐(예컨대, WTO, NPT/IAEA)의 규범, 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이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조속한 동북아 FTA의 체결

APEC, ARF, NPT/IAEA, WTO 등과 같은 초지역적 기구는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도입하고, 국가행동을 위한 대화, 규범, 원칙을 개발하고 있다. 동북아 e-Governance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동북아 FTA를 신속히 체결하여 동북아 e-Governance 도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구성 e-Governance 구축 방안

1) e-Governance 구성의 기본 방향

(1) 단계적 절차적 접근

1단계: e-Governance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한중일 3국간의 공동 이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학회가 주관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중일 3국 학자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2단계: 학자간의 연구와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각국별로 민간단체 및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공동의 합일점을 찾고, 학계와 실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진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추진사무국을 상설한다.

3단계: 2단계에 의하여 한중일의 민간경제부문에서 추진 합의과정이 끝나면,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관련 각 정부에게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정부의 담당부서 장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부문의 협의체와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4단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구체적인 안이 성안될 경우, 정부간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형태로 발전시키고, 민간부문 간의 공동으로 전자상거래를 관장할 e-Governance 기구를 구성한다.

(2) 참여범위의 단계적 확장

1단계: 한중일 3국간의 협력이 어려울 경우, 우선 한중, 한일, 중일 간에 각각 추진하되, 추진진도를 상호 참고하여 한중일 3국의 공동의 장이 마련되도록 한다.

2단계: 동북아는 한중일 3국외에 러시아, 몽골, 북한도 포함되나 우선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3국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중일 3국에서 출범하도록 한다.

3단계: 한중일 3국간의 협력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기타 국가들도 단계별로 e-Governance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3) 협력사항의 단계적 확대

1단계: 우선 관련국의 전자상거래 실태에 대한 정보교환과 현행 전자상거래상의 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하고 협력한다.

2단계: 관련당사국간의 전자상거래 네트워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재정비하여 네트워크를 연동시킬 수 있는 공동의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국의 민간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 위 1, 2단계의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정부간의 협

의에 의하여 시행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국별로 시행한다.

4단계: 한중일의 공동체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러시아, 몽골, 북한의 공동체 협력을 위한 정보화 현황을 조사하고 파악하여 한중일 3국이 역할 분담을 통하여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를 위한 작업을 착수한다.

2) e-Governance 구성의 실천 방안

(1)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의 비전 제시

글로벌화와 함께 지역적 통합의 추세는 세계 교역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동북아의 지역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동북아 국가간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각국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물론 정보격차로 인한 각국의 장애 요인이 있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각국이 상호 협력해야 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을 통한 동북아 국가와 동북아 지역의 경제활성화 등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사무국 설치

기존의 한일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 한중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전자상거래 협력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 협의회를 수렴하는 가칭 '동북아 전자상거래공동 협의회'를 구성하여 한중일이 주축 세력이 되고 한국이 주도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한중일 3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하며 상설사무국을 두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3국의 정부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개국의 관련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 정부간 기구와 여기서 협의된 주요사항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 조정하는 실무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며 추진사무국에서 정부간 협력사항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정부간의 대책을 협의 결정하도록 한다.

(3) 장애요인 제거

각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에 있어서 정부의 제도 정비와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를 검토하여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인프라 기술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과 각 정부의 법률적, 제도적인 지원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4) 민간사업자 지원정책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각국은 전자상거래의 활용 확대가 가능한 국내의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기업들에게 교육지원, 세제지원, 정보지원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요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관계로 사용자에게 될 수 있으면 편리한 인프라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프라 활용과 관련된 법적 환경도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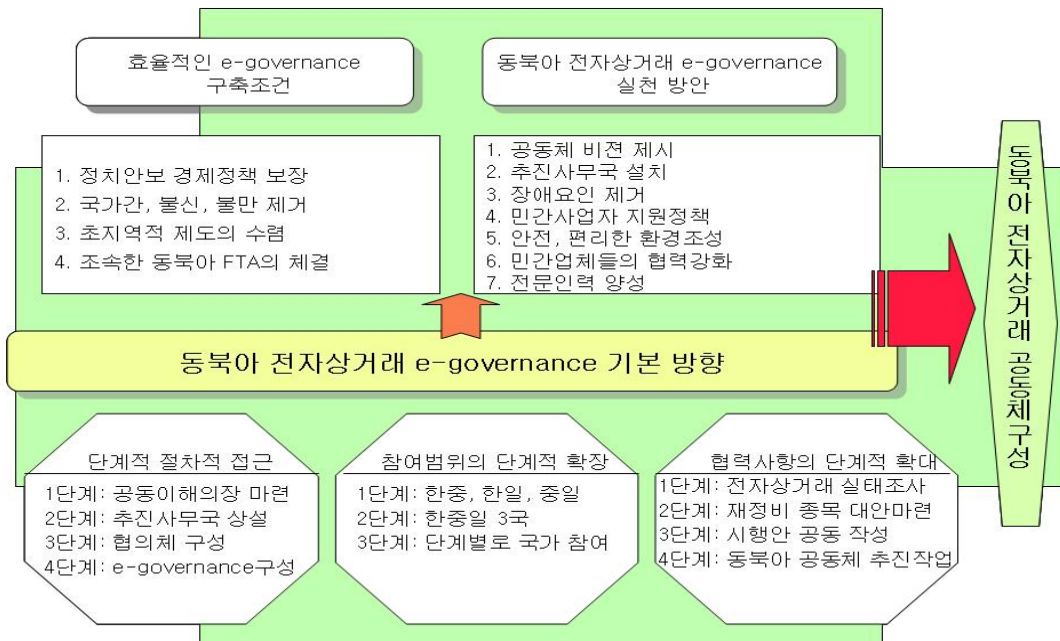
(6) 민간업체들의 협력 강화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을 위한 동북아 e-Governance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업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동북아 e-Governance가 민간 자율규제에 입각하여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들 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동북아 전자상거래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7) 전문인력 양성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을 위한 동북아 e-Governance 구축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IT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각국 및 동북아 전자상거래 교육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그림 2>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의 모형도



VI. 결 론

동북아의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협력과 각국 정부의 법제도적인 합의와 표준화 등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그동안의 전자상거래 협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e-Governance(거버넌스) 개념에 대입시켜 동북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구성을 위한 e-Governance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990년대 전통적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에 따른 국정관리 메카니즘으로 등장한 거버넌스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는 어떤 목적을 위해 그 범위안에 있는 사람이나 조직들이 함께 행동하고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을 위한 e-거버넌스를 다루고 있는데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구성 e-Governance의 유형으로서는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 모형'이 해당되며, 분석틀로서 '참여자', 'e-거버넌스 역량의 결정요인들', 'e-거버넌스 체제내의 참여자들의 역할'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로서는 정부기관, 단체, 기업체로 나누었으며 e-거버넌스 역량의 결정요인들은 각국의 참여도, 전자상거래 정책의 정합도, 정보화, 리더쉽, 유인정책의 5요소로 분석하였다.

효율적인 동북아 e-Governance의 구축조건으로 동북아 각국의 정치안보와 경제정책을 보장하고, 국가간 불만 불신을 제거해야 할 것이며, 초지역적 레짐을 설정하는데 있어 지역이슈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초지역적 제도의 수립과 세계시장을 둘러싼 경쟁속에서 조속한 동북아 FTA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구성을 위한 e-Governance의 구축방안으로서는 기본방향과 실천방안으로 구분하여, 기본방향은 실무에서의 단계적 절차적 접근, 참여범위의 단계적 확장, 협력사항의 단계적 확대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실천방안으로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의 비전 제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전제되는 '추진사무국 설치', 정부의 제도정비와 법률개정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전자상거래 활용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발굴과 함께 관련기업들을 위한 '민간사업자 지원정책',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민간업체들의 협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이 제시되었다.

참 고 문 헌

- 강황선, "정부중재형 거버넌스 체제의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자들의 범위와 역할, 그리고 거버넌스 역량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4권 제3호, 서울행정학회, 2003.
- 김구, "e-거버넌스의 발전모형과 활용과제에 대한 탐색적 접근", 「지역발전연구」, Vol.11,

- No.1, 조선대학교, 2006.
-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동향분석팀, "Issue Paper 06-10", 2006.3.
- 오현철, "국가정책결정 거버넌스와 공론조사: 토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 제15집 제2호, 2007.
- 윤광운, "동북아시아의 전자상거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7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 이미홍, 김두환,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8권 제2호, 서울행정학회, 2007.
- 이민규, "러시아 정부의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 제19권 17호, 통권 424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9.
- 이충배·이정민, "한중일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자무역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4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
- 임광현, "u_정부하에서 e_거버넌스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강화방안 一考", 「한국거버넌스학회 영호남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 임운택, "동북아시아 지역주의의 현황과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 「아시아연구」, Vol.8, No.2, 한국아시아학회, 2006.
- 전자신문, "러시아 IT 유감", 2006.5.14.
- 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07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2007.8.
- 최석범, "동북아 e-Hub화를 위한 전자권리등록기관과 전자문서등록저장소의 운영방안", 「국제상학」, 제18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 최석범, "동북아시아 전자상거래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무역학회지」, 제30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5.
- 최석범·이충배·박경희, "일본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 최석범·이영찬 "중국 전자상거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 최석범·김창봉·김시중·최혁준, "동북아 FTA 전망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국제상학」, 제22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3.
- 최석범·이영찬·박경희, "동북아 전자상거래협력의 현황과 추진방안: 한·중·일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2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6.
- 최성욱,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행정학계의 거버넌스 연구경향 분석", 「정부학연구」, Vol.10, NO.1,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4.
-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시장보고서,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현황과 발전 전망", 2006.6.20.
- 한국인터넷진흥원, APNC, RPE NCC, ARN, LACNC, AfriNIC, 「인터넷통계월보」, 2007.4.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6년 국내기업 e-비즈니스 현황조사」, 2007.1.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200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2006.12.

- 한승준, “도시정부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 2006.
- 허태완, “러시아 IT 산업정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4.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의 동북아 e-Biz 허브여건의 가능성과 과제”, 2003.7.1.
- 홍성만, “협력적 로컬거버넌스의 대두 4”, 「한국행정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4.6.
- ASPANET, “Benchmarking E-Government: A Global Perspective: Assessing the Progress of the UN Member States,” 2002. <http://www.aspanet.org>.
- BU, “The 2007 e-readiness rankings,” 2007.4.
- IDC, “Information Society 2005: 2005 Rankings and Data,” 2005.11.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7*, 2007.5.
- iResearch, “China B2B e-Commerce Research Report 2006,” 2007.
- ITU, “World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07,” 2007.5.
- Kettl, Donald F. *The Transformation of Governanc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2002.
- Moore, G. *e-Governance*, 2002. <http://www.icegov.org>.
- OECD, “*OECD Broadband Statistics to December 2006*,” 2006.12.
- Pierre, Jon(ed.), *Debating Governance: Authority, Steering, and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Riley, Thomas B., *International Tracking Survey Report 03*, “E-Government vs. e-Governance: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a Changing Public Sector Climate. May 20. 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cs Services,”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Canada, 2003.
- SOPHOS, “Security Threat Report 2007,” 2007.1.
- UN,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 2005,” 2005.12.
- UNDP, *e-Governance Strategic Note*, October, 2003.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6-7,” 2007.3.
- www.economy.gov.ru. Federal Target Program “e-Russia” Presentation.
- <http://www.neweco.ru>. “e-Russia” Program.
- <http://www.russoft.org>. *3rd Annual Survey of the Russian Export Market for Programming Services, Solutions and Products*.